大恐慌期 美國의 失業과 賃金*

車 明 洙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Ⅰ. 서 론

"불황의 10년(Depression Decade)"으로 불리는 1930년대의 미국 평균실업율은 18.2%에 달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1929년 이후 불황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지만 1930년대 미국 불황은 특히 깊었고 오래 지속되었다. 1930~38년간 영국과 독일 평균 실업율은 각각 9.8%와 8.8%에 불과했다. 이차대전이 발발한 1939년 독일에서는 완전고용이 초과달성되어 이차부문 실업율이 0.9%로 하락했고,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아직 공업노동자의 각각 8.1%와 10.5%가 실업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39년 미국의 이차 부문 실업율은 무려 25.2%에 달했다(Eichengreen & Hatton(1988, pp.6-9, Tables 1.1 & 1.2). 한마디로 미국은 이차대전이 일어날 때 까지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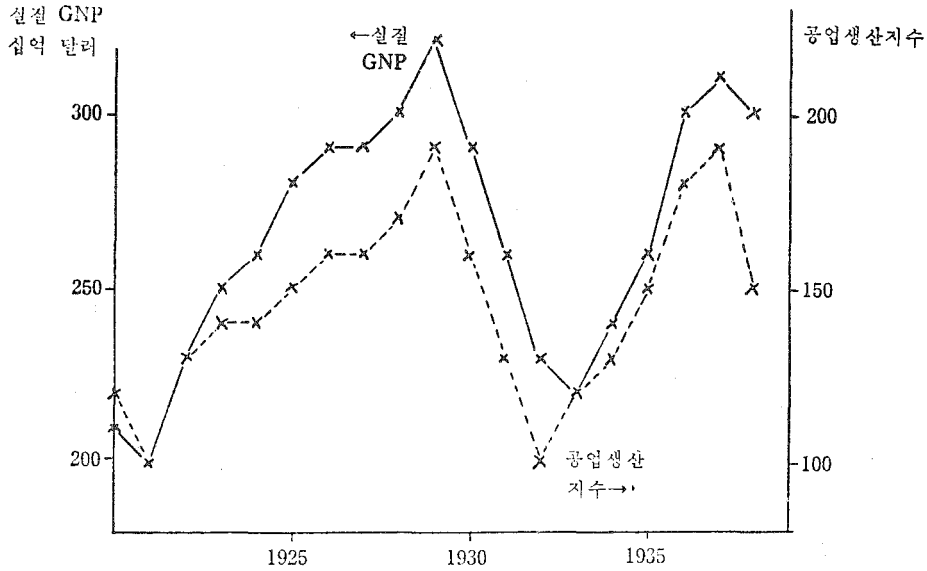
자본주의의 한 특징은 노동이 상품화되어 매매되는 사회라는 점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은 다른 상품의 가격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실업"은 현행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자 하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실업의 존재는 노동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실업은 임금을 떨어뜨릴 것이고 임금하락은 노동력 수요를 확대시키고 노동력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력 초과 공급, 즉 실업을 제거해 나갈 것이다. 이같은 시장 메카니즘의 작용은 물론 시간을 필요로 한다. 노동은 내구적이고 이질적인 상품이어서 거래비용이 높으므로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절은 특히 긴 시간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1930년대 내내 미국에서 이러한 자동 조절과정은 별로 진행되지 않았고 대량실업이 1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 물음은 이 논문의 주제다.

우리는 우선 다음 절(Ⅱ)에서 전간기 미국 경제의 변동을 생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적 지표를 이용해 요약하고, 이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모를 임금, 고용, 실업율 등을 통해 살핀다. Ⅲ절에서는 1930년대 미국 노동시장의 운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가설들을 소개한다. Ⅳ절에서는 이들 중 어느 것이 Ⅱ절에서 본 1930년대 미국 상황을 보다 설득력있게 설명하는지를 평가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미국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Ⅴ절에서는 앞 절들의 논의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다.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Ⅱ. 대공황기 미국경제와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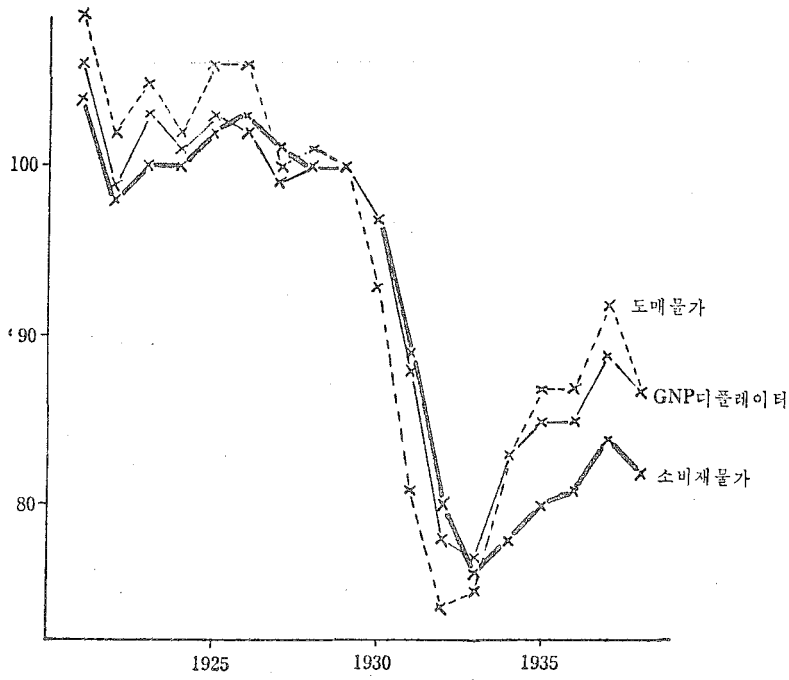
경기변동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 중 하나가 총생산의 규모다. 한 경제의 생산활동수준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실질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지만 전간기 미국 GDP 추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실질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그림 1은 "번영의 10년(Prosperity Decade)"이라는 표현에 어울리게 1921~1929년의 9년간 미국 실질 국민총생산이 50% 이상 증가한 뒤, 1929년 부터 4년간 급속히 수축해서 1933년에는 다시 1921년의 수준에 접근했고,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1937년이 되어도 미국 국민총생산은 192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림 1에서 우리는 성장 추세를 식별하기 어려운데, 이는 일차대전 이전이나 이차대전 이후에 총산출의 움직임이 추세적 성장과 단기변동을 동시에 분명히 나타내는 것과 두드러진 대조를 이룬다. 그림 1에는 공업생산 지수의 변동도 제시되어 있는데 공업생산은 실질 GNP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료 : 실질 GNP—Balke & Gordon(1986, p. 782)
공업생산지수—US Dept of Commerce(1975, p. 185)

그림 1. 미국생산의 추이

그림 2는 전간기 미국 물가 변동을 보여준다. 도매물가, 소비재 물가, GNP 디플레이터 어느 것이나 생산이 확대되고 있던 1929년 까지 안정되어 있었다. 1929~1932(1933)년간 생산이 급속히 감소하는 가운데 물가도 빠른 속도로 하락했고 이후 생산회복과 함께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지만 1937년 미국 물가수준은 1929년에 비해 8% 낮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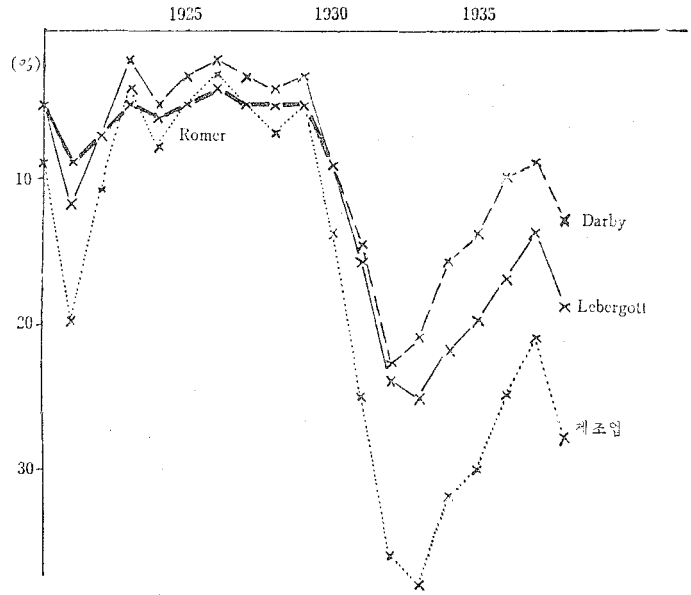


자료 : 도매 및 소비자 물가지수—US Department of Commerce(1975), p. 164, 169,
GNP 디플레이터—Balke & Gordon(1986), p. 782.

그림 2. 미국물가변동

총생산과 마찬가지로 경기변동 지표로 흔히 이용되는 것이 실업율이다. 그림 3에는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실업율 추계가 제시되어 있는데(세로축이 倒置되어 있음에 주의), 이 중 하나는 제조업 부문 실업율 추계이고 나머지 셋은 미국 전체 실업율 추계다. Lebergott의 미국 전체 실업율 추계는 1964년에 발표된 이래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Lebergott 추계는 몇가지 결함을 안고 있음이 또한 지적되고 있다. 우선 Darby(1976)는 1930년대 초 미국 정부가 실시한 각종 실업구제사업에 참가하고 있던 사람들이 Lebergott(1964)에서 실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문제시했다. 이차대전 이후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발표하는 실업율 통계는 정부의 실업구제사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실업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이차대전 이후 통계와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Lebergott의 통계를 실업구제사업이 실시된 1931년 부터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Darby(1976)는 실업구제 사업과 관련된 노동자를 실업에서 제외시킨 새로운 추계를 제시했는데 이는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1931년 이후 Lebergott의 추계를 현저히 밑돌고 있다.[1] 둘째, Romer(1986)는 1930년 이전의 미국 실업율 추계는 1948년 이후의 실업율 통계에 비해 훨씬 제한된 데이타를 기초로 보다 열등한 방법을 이용해서 제조된 것이어서, 이 점이 실업율 통계의 시

1) 그러나 Darby(1976)에 대한 Kesselman & Savin(1978)의 반박을 보라.



자료 : Lebergott(1964), Darby(1976), Romer(1986), Eichengreen & Hatton(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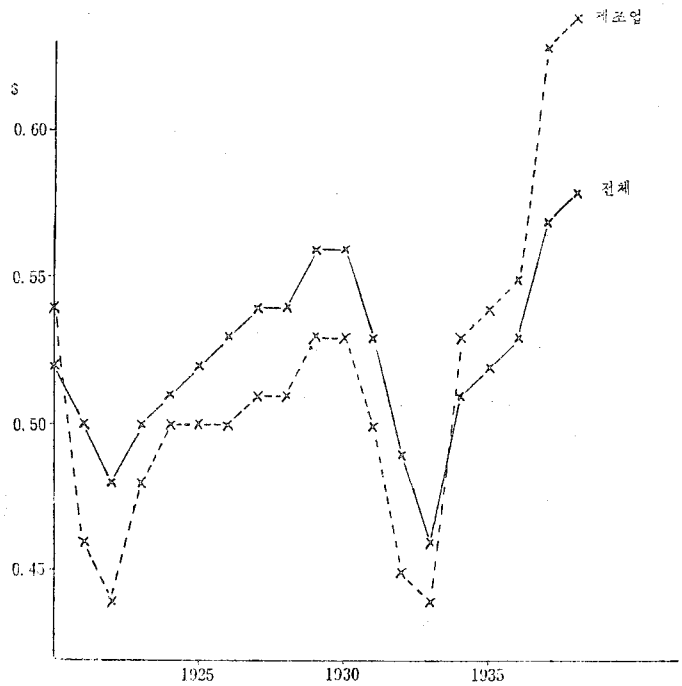
그림 3. 미국실업률

계열적 일관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Romer(1986)는 우선 자료가 풍부한 1948년 이후의 실업율을 1930년 이전과 같은 (열등한) 절차에 따라 재추정하고 그 결과와 기존의 (우월한) 실업율 통계 사이의 체계적 편차를 가려낸 뒤, 이를 바탕으로 1930년 이전 실업율을 조정했다. 그 결과는 그림 3에서 보는 것 실업율 단기변동폭의 현저한 감소다. 즉 Romer의 1920년대 실업율 추계는 Lebergott의 추계 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

그러나 어떤 추계를 따르더라도 변동 패턴에 큰 차이는 없다. 1921~1929년에 총생산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실업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 전체 평균 실업율은 7.7%에 달했다. 실업율만을 본다면 미국의 1920년대를 "번영의 10년"이라 부르기에는 어색한 점이 없지 않다. 1929년 이후 미국 전체 실업율은 크게 증가해서 1932년에는 20%를 넘었는데 이후 실업자가 감소했지만 1937년이 되어도 전체 실업율은 1929년의 수준을 현저히 웃돌고 있었다. 미국 제조업 부문 실업율은 전체실업율과 거의 같은 패턴을 따라 움직였지만 훨씬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그림 4는 전간기 미국 명목임금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산이 증가하던 1922~1929년간 미국 전체 평균 시간당 명목임금은 19%, 제조업 부문 시간당 임금은 21% 상승했다. 상품가격이 1929년 이후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한 데 비해 명목임금 하락은 1년 뒤인 1930년 이후에 분명해졌고 1933년 까지의 명목임금 하락은 19%

2) 전간기 실업률 추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는 Smiley(1983)을 참조.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1975)

그림 4. 미국 명목임금

(미국 전체) 및 16% (제조업)로서 1929~1932(1933)간 도매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각각 26%, 24%씩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1933년 이후 명목임금은 물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1938년에는 총생산, 고용, 물가와는 달리 1929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1933년 이후의 명목임금 상승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임금 증가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기 보다는 1933~1934와 1936~1937에 두번의 도약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가와 명목임금 변동을 요약하면, 1929년 까지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명목임금이 상승했고, 1929~1932(1933)간 물가하락속도가 명목임금하락 속도보다 빨랐으며, 1932(1933)년 이후 명목임금이 물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즉 물가에 비해 명목임금은 잘 떨어지지 않는 대신 쉽게 오르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전간기 동안 미국 실질임금은 분명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그림 5, 그림 6). 그림 5는 (그림 4에 제시된) 명목임금을 (그림 2에 제시된) 소비재 물가로 나눈 값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값은 어떤 노동자가 한시간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누릴 수 있는 소비수준의 지표로서 노동자들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우리는 앞으로 '소비재 임금'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림 6은 (그림 4에 제시된) 명목임금을 (그림 2에 제시된) 도매물가로 나눈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기업의 노동수요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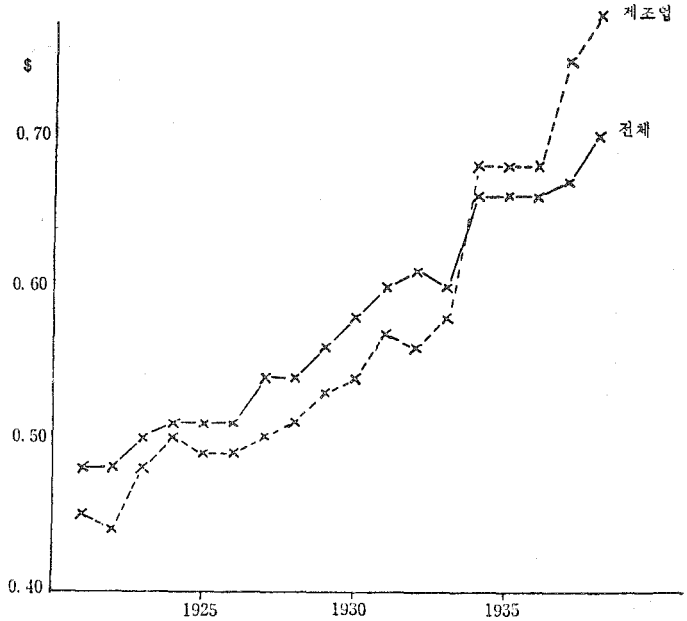


그림 5. 미국 소비재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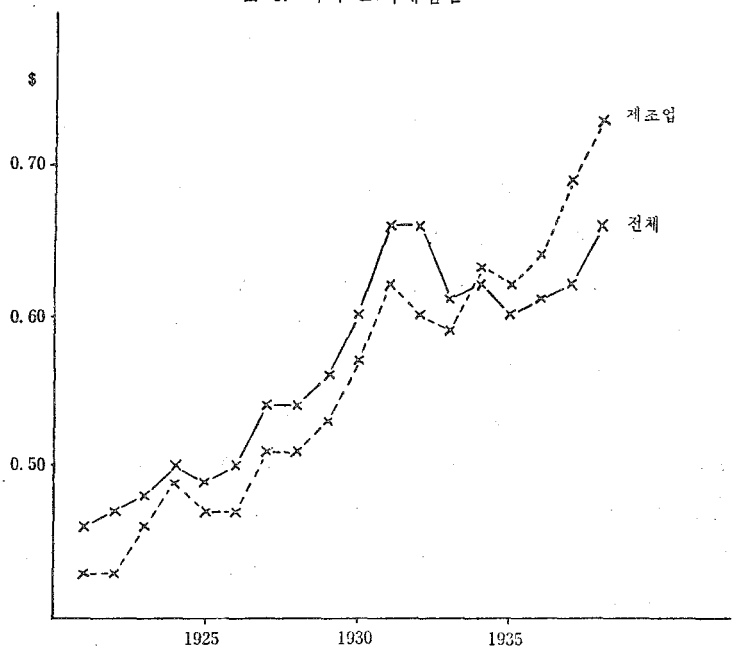


그림 6. 미국 생산물임금

양 (한계 생산)과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하기 위한 비용이 같아질 때 까지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한계생산과 비교 가능한 노동 고용 비용은 생산물로 표시한 임금이고 이는 명목임금을 생산물 가격 즉 도매물가로 나눈 것과 같기 때문

이다. 명목임금을 도매물가로 나눈 값을 우리는 앞으로 '생산물 임금'이라 부르기로 한다. 소비재 임금과 생산물 임금 모두 전간기 동안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소비재 임금 증가 속도가 생산물임금 증가 속도를 약간 앞지르고 있었다. 이는 주로 1930년대 초에 발생한 차이다. 1931(1932)년 까지 생산물 임금 증가는 소비재 임금 증가 보다 빨랐으나, 1931(1932)년에서 1936년까지 생산물 임금은 정체 또는 감소한데 비해 소비재 임금은 증가했던 것이다. 그림 5와 6을 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 1930년대 전반의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1933~1934년에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재 임금은 전례없는 대폭 상승을 기록한데 비해 생산물 임금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림 4에서 보았듯이 1933~1934년은 명목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해다. 1936~1937에 명목임금은 또 한차례 불연속적 상승을 기록했는데, 그 결과 그림 5와 6에서 보는 것 처럼 실질임금(특히 제조업 부문 실질임금)이 같은 기간에 현저히 올랐다.

전간기 미국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간기 미국 노동시장을 완전히 자유경쟁적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조합화율은 30% 내외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던 영국이나 히틀러 이전의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다. 미국의 조합화율은 1920년대에 느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1925~1929의 4년간 조합화율은 10.4%에서 9.3%로 1.1% 하락했다. 대공황기의 실업증가는 조합화율 하락을 가속화해서 1929~1933년의 4년간 조합화율은 2.0% 감소, 1933년에 7.3%가 되었다. 이후 조합화율은 빠른 회복을 보였고 1938년 전간기 최고수준인 14.0%에 달했다. 1933년 이후의 조합화율 증가는 명목임금 도약기인 1933~1934와 1936~1937의 두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3], 이는 1933년 6월 16일에 産業復興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IRA)이 발효되고[4], 1935년 산업부흥법에 대한 違憲判決에 이어 제정된 勞動關係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Wagner Act)에 따라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크게 향상[5]된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1930년대에는 대량실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고용된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이 1920년대에 비해 크게 줄었다. 미국 週當 평균노동시간은 1929년까지 49시간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고

3) 미국 조합화율은 1933~1934년간 1.6% 증가, 1936~1937년간 3.8% 증가해서 1933~1938년간 조합화율 6.7% 증가의 81%가 이 두 기간에 집중되었다. 미국 조합화율 통계는 Eichengreen & Hatton(1988, p.28)을 참조.

4) 산업부흥법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최고노동시간을 규정하며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 노동조합결성권을 인정하는 대신 독점금지법을 완화하고 기업간 담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었다. 구체적 내용은 Weinstein(1989, chapter 1) 참조.

5) 1935년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활동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을 해직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단체교섭에서 피고용인을 대표할 노동조합 선정을 감독하고 노사분규를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 이 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원만을 고용할 것(closed shop)을 요구하고, 사용자와 이에 관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Reynolds, Masters & Moser(1991, pp.362-364).

있었으나 불황이 극심했던 1934년에 41.7시간으로 떨어졌다. 이후 서서히 증가해 갔지만 2차대전 발발 이전 최고 주당평균 노동시간은 1937년의 44.4 시간에 불과했다.[6] 이같은 현상은 한편으로는 정부가 산업부흥법을 통해 작업분담(work sharing)을 실업구제의 한 방편으로 적극 장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했던 것은 노동과 자본 측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노동 조합측에서는 작업시간이 일단 단축되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작업시간을 다시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즉 일시적인 편법으로 시작된 작업시간 단축을 항구화함으로써 시간당 임금을 올릴 계산으로) 작업시간 단축에 찬성했던 데 비해[7], 기업측에서는 만일 작업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자 수가 따라서 실업구제비용이 증가할 텐데 이는 결국 기업측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시간 감소에 동의했다(Jacoby(1985, pp. 212-214)).

Ⅲ. 1930년대 미국 실업과 임금에 관한 설명들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財貨의 用役이 거래되는 많은 시장들로 이루어진 경제다. 이 시장들을 편의상 상품이 거래되는 상품시장, 노동이 거래되는 노동시장, 그리고 화폐가 거래되는 화폐시장으로 분류해 보자. 각각의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상품가격, 임금, 이자율이 있다. 이 시장들이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결과 항상 시장균형(수요와 공급의 일치)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만일 정부가 통화 공급을 갑자기 확대시킨다면 상품수요가 확대되고 따라서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물가상승은 일단 실질임금을 낮추는데,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도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이는 명목임금 상승을 초래하므로 실질임금이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정부의 갑작스런 통화공급 확대로 화폐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웃돌아 이자율이 일단 하락하지만 물가 및 임금상승은 화폐수요를 확대시키고 이자율도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통화공급 증가에 따른 총수요 확대는 총생산 수준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정한 생산기술 아래서 총생산의 규모는 자본투입량과 노동투입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본 스톡의 크기는 短期에서 不變이고 실질임금이 신속히 원래 수준을 회복하므로 노동투입량에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물가와 임금변동이 신축적인 경제에서 수요충격은 이처럼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6) 제조업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1929년까지 약 44시간이었던 데 비해 1934년 34.6 시간으로 떨어졌고 1937년에는 38.6시간으로 증가했다. Baily(1983, p. 23)

7) Jacoby(1985, pp. 212-214). 모든 노동조합이 작업시간 단축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합은 일인당 노동시간 감소에 의한 작업분담("work-sharing")은 빈곤의 분담("sharing of misery")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공급충격은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령 기술발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산 확대를 초래하지만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더 한층 생산을 증가시킨다. 흉작이나 오일 쇼크와 같은 부정적 공급 충격은 반대의 영향을 미쳐 생산을 감소시킨다. 1939년 발간된 "경기순환(Business Cycles)"에서 Schumpeter는 영국 산업혁명 이후 대공황에 이르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은 가격신축 경제(Schumpeter(1939, p. 42)의 표현을 빌리면 "왈라스적 균형 상태")에 기술혁신(innovation)의 충격이 간헐적으로 가해져 온 과정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잘 알려진 대로 어떤 진취적인 기업가(entrepreneur)가 새로운 생산기술을 도입하면, 이를 모방하는 다른 기업들(imitators)이 있게 마련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술은 경제전체로 전파되어간다. 생산기술 발전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Schumpeter(1936, pp. 130-134)에 따르면 이것이 번영기(prosperity)의 본질이다. 한 시점에서 기술혁신은 몇몇 부문들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혁신의 가능성에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확대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다. 따라서 번영기는 끝나고 침체기(recession)가 이어지는데, 침체기에는 기술발전이 없으므로 생산이 정체한다. 새로운 기업가가 나타나 다른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수행하면 침체가 끝나고 번영이 다시 시작된다. 기술혁신의 효과는 항구적이므로 자본주의는 계단 모양의 경로를 따라 발전해 간다. 계단형 발전경로를 멀리서 보면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부드러운 직선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장"이라 불리는 자본주의의 한 동태적 측면에 해당한다. 가까이서 보면 "성장"을 중심으로한 요철 모양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는 "경기변동"이라 불리는 다른 동태적 측면이다. 따라서 성장이나 경기변동이나 모두 기술발전의 결과다. Schumpeter(1939)는 영국산업혁명 이래 1939년 까지 세 차례의 중요한 기술발전이 있었으며, 이것들이 세 번의 경기변동(Kondratieff cycles)을 유발했다고 보았다. 처음 나타난 경기순환은 근대적 직물 생산기술, 제철기술, 증기기관 발명에 따른 것으로 이는 1787~1842 동안 진행되었고, 1842~1897에는 주로 철도건설이 주도하는 순환이 진행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전기공업 발전이 중심이 되는 경기변동이 나타났다. Schumpeter에 의하면 1930년대 대공황은 바로 이 세번째 순환의 침체국면에 해당한다.[8] 즉 Schumpeter(1939)에 따르면 대공황이 궁극 원인은 기술혁신 정체에 있다.

경기변동을 이같이 왈라스적 일반균형상태에 공급충격이 가해진 결과로 이해한다면 경기변동과정에서 생산과 고용의 수준이 변화하지만, 실업자—"현행 임금을 받고 일할 뜻이 있어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느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호황기에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기술발전으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 노동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따라서 임금이 상승해서 노동공급이 증가한 결과인데, 호황기에 새롭게 생산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임금이 오르기 전의 낮은 임금을 받고는 일할 의사

8) Kuznets(1940)는 이 세 차례의 순환에 각각 산업혁명 순환, 부르주아 순환, 신중상주의 순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 없었고 따라서 실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흉작과 같은 부정적 공급충격이 유발한 불황기에 일어나는 고용감소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언제나 현행 임금을 받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취업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하는 시장경제에서 공급충격의 결과 발생하는 고용변동은 실업이 아니라 노동력(labor force) 변동이다.

1936년 발간된 "고용, 이자율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Keynes(1936, p. 14)는 물가나 임금이 신속하고 민감하게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반응한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다. 임금의 경우가 특히 그러한데, 노동은 사과나 옷감 같은 재화에 비해 이질성이 높은 상품이어서, 재단사로 일하던 사람이 컴퓨터 기술자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다음날 부터 양복점을 그만두고 컴퓨터 공장에서 일할 수는 없다. 노동의 부문간 이동성(mobility)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질적인 노동이 거래되는 여러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수준들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고 상이한 임금들 사이의 相對性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떤 노동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노동수요가 갑자기 감소해서 초과 노동 상태가 나타났다고 해도, 임금은 잘 떨어지지 않는데, 임금이 하락하면 다른 임금들과의 상대적 관계가 깨지고 따라서 노동자들이 임금 하락에 대해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결과 명목임금은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 즉 下方硬直性(downward rigidity)을 나타낸다.

노동시장이 이같은 점에서 불완전하다면 기술발전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현실경제는 여러 생산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두개의 생산부문—A와 B—만이 있다고 하자. 앞서 Schumpeter(1939)가 지적했듯이 기술혁신은 경제 전체에 걸쳐 전반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몇몇 부문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A 부문에서만 기술발전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자. 기술혁신은 A에서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따라서 우선 B에 투자되어 있던 자본이 A로 이동할 것이다. A에서는 기술발전 외에도 자본 투입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노동수요가 증가한다. 반대로 B에서는 자본투입이 감소하므로 노동생산성이 하락, 따라서 노동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부문간 노동력 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A에서는 노동에 대한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이는 임금을 상승시킨다. 임금상승은 이미 A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을 유발하고 이는 초과 노동수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이다. 반면 B의 노동 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지만, 즉 실업이 발생하지만, 임금이 하방경직적이므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

Bernstein(1987, chapter 5)은 1930년대 미국 실업이 이처럼 구조적인 성격의 것—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1930년대의 미국에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침체산업이 있었다. 성장산업으로 특히 두드러졌던 것은 식품가공, 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내구성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이었는

데, 이들 성장 산업의 확대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았고, 또 성장 산업들에서 요구되는 노동은 침체산업에서 방출되는 노동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에 1930년대의 대량실업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간기 미국의 성장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이었으므로 성장산업 확대에 따른 고용확대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9]

노동자들이 부문간 임금들 사이의 상대성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명목임금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비슷한 이유로 물가의 신축적 변동이 방해받을 수 있다. 어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로 부터 여러 종류의 원료, 도구를 구입해야 하고 따라서 기업들 사이에는 복잡한 구매공급의 연결이 맺어진다. 이 기업은 자기가 원료 등을 구매해 오는 기업들 또 자기 물건을 사가는 기업들 중 일부는 알고 있지만 공급자와 구매자 전체에 관한 소상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든다면 이 기업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가격 인하, 다른 하나는 생산 감소다. 가격을 인하하면 수요가 회복되겠지만, 만일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도구 가격이 같이 떨어져 주지 않는 한 이 기업의 수익률은 크게 악화될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파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동시에 가격을 인하하면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 확대효과는 크게 감소하고, 따라서 가격인하가 갖는 위험은 더 커진다. 복잡한 구매—공급 관련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 만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은 자신의 가격인하 결정이 가져올 다른 기업들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수요 위축에 대해 가격 인하가 아니라 보다 안전한 생산 감소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현상은 '조정 실패(coordination failure)'로 알려지고 있다.[10]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동하는 경제에서와는 대조적으로 가격과 임금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에서는 수요변동이 생산과 고용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앞의 예와는 반대로 정부가 통화공급을 갑자기 감소시켜 총수요가 감소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지만 조정실패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기 보다는 생산을 감소시킬 것이다. 생산이 감소하므로 기업들의 노동에 대한 수요 따라서 고용량도 감소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의 상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하락에 저항하므로 명목임금은 별로 하락하지 않는다.[11] 임금이 그대로이므로 노동공급도 그대로인데, 기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하므로 노동 초과 공급, 즉 실업이 발생한다.

총수요 감소 이후 기업들이 생산하게 된 생산량은 현행 가격 수준에서 기업들에게 최대의

9) "많은 경우에 〔성장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속가공공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 결과 기계화가 확대되고, 단위 기계 또는 공정當 고용인 數가 감소했다." Bernstein (1987, p.147). 이러한 미국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동은 이미 1920년대부터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차대전 이후에도 계속된 장기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10) 조정실패에 관해서는 Cooper & John(1988)을 참조.

11) 장기고용계약(long-term labour contract) 제도는 명목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

이윤을 가져다 주는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업은 시장 위축으로 원하는 만큼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는 '할당'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현행 임금을 받고 일하려는 사람의 수가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수 보다 많다. 따라서 가격과 임금은 서서히 하락해 간다. 가격과 임금 하락은 화폐수요를 감소시키고 화폐수요 감소는 이자율을 하락시켜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따라서 총수요를 자극한다. 총수요 확대는 생산 및 고용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요 감퇴가 생산을 위축시키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임금 및 가격 조정이 완료되면 생산과 고용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 온다.[12]

Weinstein(1980a)에 따르면 1933년 제정된 産業復興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 같은 자동조절과정을 방해하고 지연시켰다. 최저임금제, 최고 노동시간 제한,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 교섭권 보장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産業復興法의 실시로 명목임금과 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그 결과 1) 실질 富(real wealth)가 감소함으로써, 2) 화폐수요가 증가해서 이자율에 상승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소비나 투자수요, 따라서 총수요가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또 産業復興法의 영향 아래서 물가보다는 명목임금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는 데 이는 기업의 노동력 수요를 위축시켰다. 물론 산업부흥법의 본래 의도대로 실질 임금 상승으로 미국의 분배구조가 현저히 평등해졌고, 그 결과 전체 소비수요가 어느 정도 확대됐지만[13] 위의 부정적 효과는 이같은 긍정적 효과를 압도해 버렸다는 것이 Weinstein (1980a, chapter 4)의 주장이다.[14] 産業復興法이 위헌으로 판결난 뒤 이를 계승하기 위해 1935년 제정된 勞動關係法(와그너 法) 역시 미국 경기 회복을 같은 방식으로 방해했다고 Mitchell(1986)은 주장했다.

이같은 설명에 대해서는 그러나 1930년대 전반과 같이 대량실업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 개입이 과연 이처럼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었을까라는 반문이 있다.[15] 특히 Jensen (1989, p. 558)은 1930년대 초는 노동조합의 세력이 매우 약했던 시기여서 대공황기의 실질 임금 상승현상을 단체교섭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대공황기 미국 실업에서 장기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에 주목했다.[16] 대공황 이전의 미국 실업은 모든 노동

한 요인으로 흔히 지적된다. 그러나 평균 3년 길이의 장기고용계약은 1948년 General Motors와 United Auto Workers 사이의 단체협약을 계기로 보편화된 것으로(Gordon(1982, p. 40)), 전간기 미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Baily(1983, p. 44) 참조.

12) 그림을 이용한 상세한 설명은 Gordon(1990, pp. 233-238)을 참조할 것.

13) 저소득층은 고소득층 보다 평균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분배의 평등화는 전체소비수요를 증가시킨다. 실질 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재분배해서 소비수요를 자극함으로써 대공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구매력 이론(purchasing power theory of recovery)'이라 불렸는데 이는 産業復興法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14) Temin(1990)도 Weinstein(1980)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15) Cagan(1981, p. 283), Baily(1983, p. 54), Gordon(1990, p. 194)

16) Jensen(1989, p. 557, Table 1)의 계산에 따르면 1934년 부터 장기실업(structural and hardcore unemployment)이 순환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1934년의 전체 실업률 22% 중 장기실업이 10%, 순환적 실업이 8%였고 나머지 4%가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이었다.

자들에게 공평하고 무작위적으로 가해지는 "상당히 민주적인 고통"(p. 564)이었던 데 비해, 1930년대에는 오랜 동안 실업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골수 실업자(hard core unemplopyed)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 임금 상승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이 병존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장기실업자들이라고 해서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던 것은 아니었다. 후버대통령의 말대로, 그들은 언제라도 "구두를 닦거나 사과를 팔" 수는 있었지만, 이보다는 "제대로 된 직장"을 찾고 있었다. 1920년대보다 오히려 높은 대공황기의 노동자 이동율(즉 해고율과 고용율)이 보여주듯이 장기 실업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일부 노동자는 직업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 해고되더라도 이내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었다. 즉 1930년대 미국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고용, 승진 가급성, 괜찮은 노동조건과 보수를 제공하는 주요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과 사과팔이나 구두닦기 처럼 고용이 불안정하고 승진 전망이 거의 없으며 노동 조건과 보수가 열악한 부차적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으로 구성되는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Rees(1970), Baily(1983), Margo(1991)).

1930년대 노동시장의 이러한 구조는 일차대전기에 비롯된 미국 노사관계의 장기적 성격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Jacoby(1985)에 따르면 1914년 이전의 미국에서는 什長(foreman)이 주로 해고 위협을 수단으로 노동 효율을 높이는 노동통제 방식(drive system)이 지배하고 있었다, 고용과 해고는 什長의 자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고용은 불안정적이었다. 일차대전기 동안 노동력 부족과 정부의 노동조건 개선 정책의 영향으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人事課(personnel department)를 설립하고 노무관리를 합리화함으로써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고용과 해고에 관한 일관된 규정, 분명한 승진체계에 따른 內部者 우선 고용 원칙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이 발전했는데, 그 결과 고용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내부노동시장은 비효율적 노동자의 제거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측에 불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용의 안정성은 기술훈련 투자와 같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업측에도 유리한 것이었다.[17]

내부노동시장 발전과 병행해서 노동력 수급변동에 따라 임금을 변동시키기 보다는 고정된 임금을 지불하는 관행이 보급되어 갔다. 이는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수입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사용자로서는 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평판을 높여 이직률을 낮춤으로써 노동이동 비용(turnover cost)을 절감시킨다는 점 등에서 매력적인 것인데, 따라서 노동과 자본 간에 체결된 "암묵적 계약(implicit contract)"이라고 볼 수 있다.[18] 내부노동시장과 암묵적 계약은 임금의 신축적 변동을 방해할 것이며 따라서 위에서

17) 내부노동시장 발전 원인에 관한 다양한 견해의 소개는 Osterman(1984, pp.8-13)을 참조.
18) 암묵적 계약 이론에 관해서는 Baily(1974), Azariadis(1975) 등을 참조.

설명한 자동조절과정을 지연시킬 것이다.[19] Baily(1983)는 뉴딜 立法과 아울러 암묵적 계약의 존재로써 1930년대에 미국에서 대량실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실질임금이 상승했던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使用者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부노동시장은 노동자들에게 '승진'이라는 작업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인 것이다. Jensen(1989)에 따르면 내부노동시장 발전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은 生産性 提高 手段으로 高賃金 정책을 또한 채택했다. 한 기업이 만일 다른 기업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한다면 더 능력있는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모일 것이고 따라서 필요한 노동자 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릴 때 총노무 비용은 낮은 임금을 제공할 때 보다 절감될 수 있다. 고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효율적인 노동통제다. 열심히 일하는 본성을 가진 일부 노동자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일에 대해 자발적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동과정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도 있지만, 시세 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해서 열심히 일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를 모집한 후 일정한 견습 기간을 두어 불시 점검을 통해 태만한 노동자를 가려내는 방법도 있다. 고임금을 지불하면 질높은 노동자를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일단 고용된 후 노동자들은 조건이 좋은 현재의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고임금을 책정한다면, 시세 임금을 제공해서 고용한 노동자들을 작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직접 감독하는 것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 이같이 노동생산성 향상을 노리는 기업이 지불하는 고임금은 '효율임금(efficiency wage)'으로 알려지고 있다.[20] 효율임금이 일반화되면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노동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다. 또 초과노동공급의 존재가 반드시 임금 하락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이며,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자동조절과정의 진행 속도는 매우 느려질 것이다. Jensen(1989)은 효율임금의 시행 때문에 1930년대 미국에서 대량실업이 장기화되었다고 주장했다.

---

19) Gordon(1982, p. 25, 26)은 이차대전 이전에 이미 미국 물가와 임금 변동이 경직화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는 Cagan(1975)과 Sachs(1980)를 확증하는 결과다. 그러나 Allen(1992)에 따르면 이들이 발견한 미국 명목임금의 경직화 현상은 이차대전 이전과 이후의 임금 추계방식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일관된 방식으로 재추정된 임금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Allen(1992)은 1891~1987의 한세기동안 명목임금 신축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하이오 제조업체들 중 1892~1910년간 발생한 불황기에 명목임금을 삭감한 예는 소수에 불과했다는 Sundstrom(1990)의 관찰은 Allen(199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20) 효율임금 이론에 관해서는 Akerlof(1980, 1982, 1984), Shapiro & Stiglitz(1984), Weiss(1991) 참조. 효율임금 이론은 1980년대에 정식화 되었지만 Henry Ford는 이미 1914년 1월에 일반 생산노동자 임금의 두배가 넘는 일당 5달러의 효율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직률, 결근율의 급격한 감소, 생산성의 놀라운 향상을 가져왔다. Raff & Summers(1987) 참조. 효율임금 이론과 앞서 설명한 구매력 이론을 결합한 것을 '포드주의(Fordism)'라 부르기도 한다.

Ⅳ. 가설들과 現實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공황기 미국 실업과 임금에 관한 설명들은 모두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 가격과 임금이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가격과 임금 변동이 신축적이지 않은 원인에 관해서는 그러나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Bernstein(1987a)이 명목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그 원인에 관한 논의 없이 이질적 노동의 부문간 이동성의 제약으로써 대공황기 미국 실업을 설명한다면, Weinstein(1980a)과 Mitchell(1986)은 산업부흥법과 노동관계법이 1930년대 미국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강화시킨 결과 노동시장의 균형회복과정이 현저히 지연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Baily(1983)는 안정된 보수를 선호하는 노동자와 노동이동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의 사기를 유지하려는 사용자들 간의 암묵적 계약으로써, Jensen(1989)은 노동생산성 제고를 노리는 기업들의 효율임금으로써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따라서 1930년대에 대량실업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사실을 설명한다.[21]

Ⅲ절에서 보았듯이 시장에서 가격과 임금의 변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생산과 고용 변동을 동반하는 경기변동은 대부분 공급측면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가격과 임금 변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난다면 공급충격 뿐 아니라 수요충격도 경기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 가격과 임금 변동이 경직적이어서 생산물 시장에서 판매가 할당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한다면, 수요 확대는 한편으로 물가를 완만히 상승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다.[22] 수요 위축은 반대로 물가와 생산, 고용을 모두 감소시킨다. 즉 수요충격이 주도하는 경기변동 과정에서 물가와 생산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공급충격이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경우 물가와 산출량은 반대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

21) 신축적 가격과 임금을 가정하면서 대공황기 미국 실업을 설명하려한 유일한 시도로서 Lucas & Rapping(1969)이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 따르면 1929~1933년간의 물가 및 임금 하락은 일반의 예상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 변화일 것으로 판단했고, 장차 물가와 임금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같은 기대 아래서 노동자들은 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은 현재 보다는 미래에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노동공급이 감소, 즉 고용이 감소했다. 또 물가 상승 기대는 실질 이자율을 하락시켰는데 이 역시 노동공급을 감소시켰다. 한 마디로 대공황기의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이들의 모델은—Lucas & Rapping(1972)도 인정하듯이—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1933년 이후에 반대의 과정이 매우 완만하게 밖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Rees(1970) 참조. Darby(1976)는 실업구제 사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실업에서 제외시키고 보다 적절한 임금 통계를 이용할 때 이러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였다. 그러나 Darby(1976)에 대해서는 Kesselman & Savin(1978)의 비판이 있다. 1929년 이후의 물가하락이 예상을 초과하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는 Hamilton(1992)과 Ceccheti(1992)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22) 상세한 설명은 Gordon(1990, pp. 233-238)을 참조.

이는 노동수요를 확대시켜 고용과 생산이 증대되며 이는 물가를 하락시킬 것이다. 오일 쇼크와 같은 부정적 공급충격은 생산 위축과 물가 상승—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1929년 이후 미국 경기변동은 주로 수요충격에 의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공급충격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그림 1, 2와 3을 비교해 보면 1929~1932/1933 동안 미국 물가, 산출량, 고용이 동시에 하락했고, 1932/1933~1937에는 동시에 증가했으며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29년 이후 미국 경기를 좌우한 것은 주로 수요충격이었음을 시사한다.[23]

1929년 이후 미국경기 위축을 가져온 수요충격이 실물적인 것인지 아니면 화폐적인 것인지를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이는 이 논문의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다.[24] 여기서는 다만 근래에 실물적 충격과 화폐적 충격 사이의 밀접한 상호 관련을 강조하는 절충적인 설명으로 이견이 수렴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즉 과열된 증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 이사회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취했는데, 이는 한편으로 다른 나라들에도 통화긴축을 강제함으로써 이들 나라의 경기 침체를 초래했고 이는 미국 수출수요 위축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 긴축정책은 주가폭락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자동차 같은 값비싼 내구 소비재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고, 1930년대 말에 취해진 또 한 차례의 통화긴축은 이미 시작된 불황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25] Temin & Wigmore(1990)에 따르면 1933년 2/4분기 부터 미국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어 간 것은 1933년 4월 19일 미국의 금본위제 포기에 기인한다. 우선 금본위제를 고수하기 위해 이전처럼 연방준비 이사회나 미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펼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디플레 기대가 인플레 기대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농산물가격은 미국 내의 수요와 공급 변동 보다는 국제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는데 금본위제 포기에 따른 달러화 평가절하는 미국내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켰고, 이는 미국 농민들의 구매력을 확대 시켰을 뿐 아니라 미래 소득 증가 기대를 형성시킴으로써 공산품—특히 자동차—수요를 증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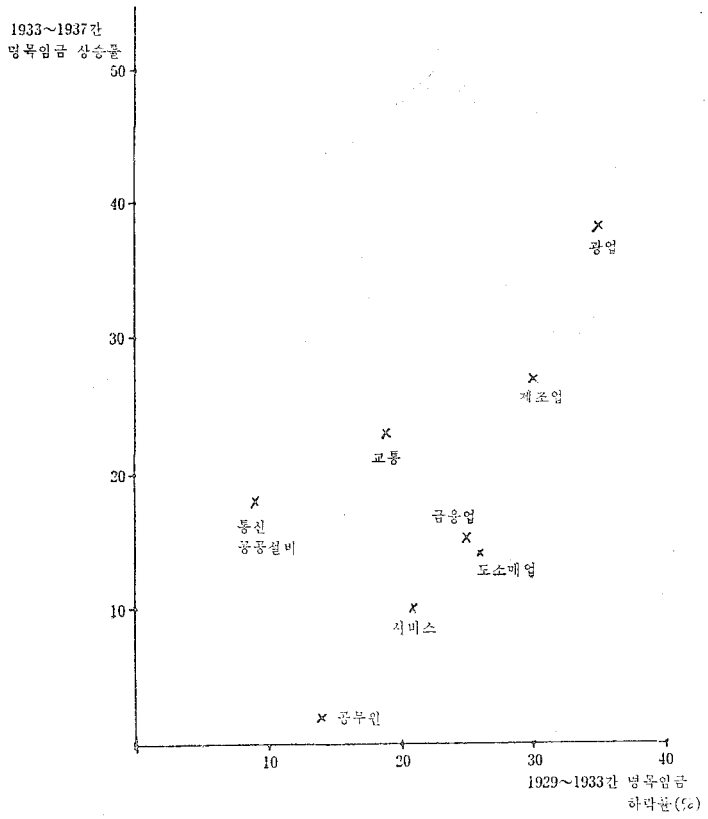
1929년 이후 미국 경기 변동에서 수요변동이 이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공급충격을 강조하는 Bernstein(1987)의 설명과 배치된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1932년 이후의 경기회복은 기술발전을 기초로 한 성장산업들—식품가공, 화학공업, 서비스 산업—의 대두에 따른 것일 텐데 이는 한편으로 생산 확대를,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하락을 초래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1과 2에서 본 것처럼 1932/1933 이후 물가와 생산은 1937년

---

23) Kydland & Prescott(1990)에 따르면 이차대전 이전 미국에서 물가와 생산이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였던데 비해 이차대전 이후에는 반대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대공황기 미국 경기변동에서 공급충격보다 수요충격이 더욱 중요했음을 보이는 다른 증거로서 Bernanke & Parkinson(1991)을 참조.

24) 이른바 "Temin 논쟁"에 관해서는 Friedman & Schwartz(1963, chapter 7)와 Temin(1976)을 참조.

25) Eichengreen(1992a, pp. 221-224), Eichengreen(1992b), Temin(1989) 참조.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1975, p. 166, 167).

그림 7. 산업별 명목임금 하락률과 상승률

까지 동시에 상승했다. 또 그의 주장처럼 1930년대의 실업이 주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구조적 성격의 것이었다면, 부문간 임금 변동 패턴에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침체 산업에서는 성장산업에 비해 1929~1933년간 임금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1933년 이후에는 성장산업에서 임금이 더 빨리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7에서 보는 것 처럼 1929~1933년간 명목임금이 빠른(늦은) 속도로 감소한 산업에서는 1933~1937년간 역시 빠른 (늦은)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8은 1929년 이후 취업율(100%에서 실업율을 뺀 것)과 실질 임금 변동경로를 보이고 있다. 먼저, 1929~1933년간 수요의 위축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재물가, 도매물가, 명목임금이 모두 하락했지만(그림 2, 3, 4) 명목임금이 물가에 비해 보다 경직적이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상승했음을 볼 수 있다. 물가변동이 보다 신축적인 이유로서 첫째 原料의 상당부분이 競賣시장에서 거래되고 따라서 원료가격은 수급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비해 노동의 중앙거래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기업이 이윤폭을 단기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비해 노동자들은 수입의 증감을 감당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사실 등이 들어진다(Gordon(1990, p. 237)). 그림 7에 따르면 1929~1932 동안 도매물가가 소비재물가에 비해 신축적이었으므로 생산물 임금은 소비재 임금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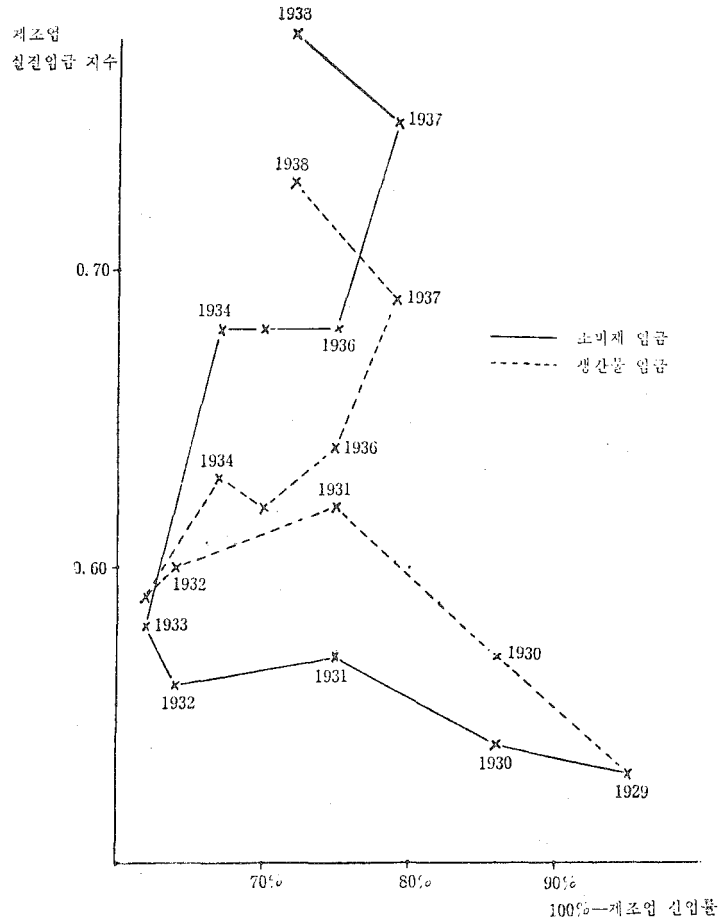


그림 8. 미국 제조업 취업률과 실질임금, 1929~1938.

했다. 소비재 물가가 보다 하방경직적이었던 한 이유는 아마 소비재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결정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933년 이후 금본위제 포기와 이에 따른 총수요 확대로 고용, 물가, 명목임금이 모두 증가했다(그림 2, 3, 4). 그러나 그림 8은 물가상승이 명목임금 상승에 미치지 못한 결과 1933~1937년간 실질 임금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앞서 지적한 대로 실질 임금 상승은 1933~1934년간과 1936~1937년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소비재 임금 변화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기간은 각각 산업부흥법과 노동관계법의 영향 아래서 조합화율이 두번의 도약을 기록한 해다. 1929~1933의 수요위축기에 물가가 명목임금 보다 빨리 떨어졌던데 반해 1933~1937의 수요확대기에는 명목임금이 더 빨리 올랐다는 사실, 또 1933 이후의 명목임금 상승이 노동조합성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1933년 이후의 물가상승이 한편으로는 수요확대에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뉴딜立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성장이 가져온 費用引上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질임금 상승이 1933~1934와 1936~1937 두 해에 집중되는

현상이 소비재 임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같은 해석과 부합한다. 노동조합 성장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에 대해 미국 기업들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명목임금상승은 이내 생산물 가격—즉 도매물가—상승을 초래했고 따라서 생산물임금상승은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쳤다. 반면 소비재 가격은 많은 부분이 국제시장에서 결정되고 따라서 도매물가 보다 미국 내 상황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명목임금 상승은 거의 그대로 소비재 임금 상승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8이 보여주는 1929년 이후 미국 임금과 고용변동은 Weinstein(1980a)과 Mitchell(1986)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내부노동시장 발전이나 암묵적 계약, 또는 효율임금의 존재만으로써 그림 8을 합리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요인들이 대공황기 미국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함으로써 고용회복을 방해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33년 이후 총수요 확대로 경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업율이 아직 10%를 훨씬 넘는 상황 속에서 왜 실질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던지를 이러한 요인들로는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없다. 암묵적 계약이나 내부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의 이직율을 낮춤으로써 노동자 훈련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고 빈번히 노동자를 교체하는데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에 대량실업이 존재했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면, 기업들은 굳이 임금을 올리지 않고서도(아마 이전 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효율임금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노동통제를 위한 것이다. 1930년대의 미국노동시간은 買主市場(buyers' market)이었으므로 기업들은 더 나은 보수라는 유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가려 뽑을 수 있었을 것이며, 장기실업의 위협이 상존하는 속에서 노동자들은 보수의 수준과는 별 상관없이 怠慢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1930년대 미국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운동을 나타내는 현상들의 가장 많은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가설은 이처럼 Weinstein(1980a)과 Mitchell(1986)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산업부흥법이나 노동관계법을 1930년대 미국실업의 주요 범인으로 부각시키는 경우 10%를 훨씬 넘는 실업율 아래서 정부개입이 10% 내외의 노동자를 포섭하고 있던 노동조합을 통해서 과연 그림 8에서 보는 것 같은 커다란 상승압력을 임금에 미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는 뉴딜 입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성장이라는 충격과 1933년 이후의 미국 경기회복 및 노사관계의 장기적 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이다.

1933년 이후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따라서 노동 수요가 확대되어 갔다. 다수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노동수요 확대는 임금에 그다지 강력한 상승압력을 가할 수 없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1929~1933년간 생겨난 실업자중 많은 숫자가 장기간 실업

상태에 머무르는 가운데 이들이 가진 기술이 부식되어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면 실업자중 상당수는 사실상 더 이상 노동공급원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는 보다 강력한 임금상승 요인일 수 있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영향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둘째, 1929~1933년간 대량실업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질이 이처럼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면 사용자들은 대량실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효율임금을 지불해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뉴딜 立法으로 노동조합이 성장하자 기업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가담하고 있거나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를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려냈는데(Jacoby(1985, p. 234)), 따라서 '쓸만한' 노동력 공급이 감소했고, 이는 효율 임금 수준에 더 한층의 상승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세째, Jacoby(1985, chapter 7)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기업들의 또 다른 대응으로 폭력과 위협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什長 대신 인사과를 주축으로 하는 합리적 노무관리 방식의 도입이었다. 합리적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일부 기업들은 정당화될 수 없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 했는데(Jacoby(1985, p. 235)), 이는 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깎기 보다는 낮은 임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또한 전반적 임금 상승에 기여했을 것이다.

네째 전반기 미국노동조합운동은 중요한 산업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단체교섭에 의한 이들 부문에서의 임금 상승은 임금간 상대적 관계를 파괴했는데, 이것이 가져올 노동조합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도 조합화된 부문 수준으로 임금을 올렸다(Olson(1982, p. 226)).

1930년대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한편으로 뉴딜 입법과 다른 한편으로 노사관계의 변혁, 그리고 1933년 이후의 경기회복이 상호 작용하면서 임금에 상승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따라서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는 히틀러 治下의 독일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1933년 1월 정권을 장악하자 나치(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는 우선 바이마르 체제 하에서 급속히 성장해서 1932년 노동자의 38%를 포섭하기에 이른 노동조합을 단시일에 완전히 파괴했다. 나치정권은 노동조합 대신 임금교섭을 담당할 주체로서 독일 노동전선(Deutsche Arbeitsfront)을 설립했다(Hardach(1980, chapter 4)). 그 결과 미국에서는 생산물 임금이 1929~1938년간 30% 증가한 데 비해 독일에서는 불과 7.7% 증가하는 데 그쳤다(Eichengreen & Hatton (1988, p. 15, Table 1.3)). 나치 정권 아래서 실질임금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실업율은 급속히 떨어졌다. 1932년 30.1%에 달했던 실업율은 1938년에 2.1%가 되었다(Mitchell (1977, p. 667)).[26] 노동조합 파괴를 통한 임금억제 이외에도 나치는 선전과 세금혜택을 통해 여자들의 취업을 저지했고, 1935년 부터 강제 노동을 도입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26) 히틀러 시대의 노동통계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Silverman(1988)을 참조하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Cohn(1992)), 이들 조치가 또한 신속한 실업 감소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일본은 세계대공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나라에서 생산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던 1929~1931년간 일본의 실질 총산출은 1.5% 증가했다. 이를 연평균 성장율로 환산하면 0.7%가 되는데, 이는 1920년대 일본의 추세성장율 2.27%나 1930년대의 5.01%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므로 1929년 이후 실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 실업율은 최고에 달했던 1930년에도 6% 정도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7] 일본이 사실상 대공황의 영향권 밖에 있을 수 있었던 한 원인을 우리는 佐藤(1981)가 지적하듯이 일본의 가격과 임금이 매우 신축적으로 변동했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28] 일본은 세계 대공황의 타격을 거의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로 부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벗어났는데, 여기에는 1931년 12월 일본이 금본위제를 포기함으로써 국제수지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케인지안적 경기 부양 정책의 펼 수 있게 되었고, 금본위제 이탈에 따른 엔貨의 40% 평가절하가 일본의 상품수출을 자극한 사실이 크게 기여했다.[29]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에서 생산물 임금 지수가 1932년에 121.6의 정점에 도달한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1938년에는 86.3이 되었다는 점이다(Eichengreen & Hatton(1988, p.15)). 1920년대의 '다이쇼 민주주의' 시기에 일시적인 세력 확대를 이룩했던 노동조합이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파시즘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불법화되고 심한 탄압 아래 놓이게 된 사실과 이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30년대의 일본 조합화율은 5~8%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Macpherson(1987, p.69)).

전간기 일본이 거시경제적 안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영국은 1920년대 부터 높은 실업율에 시달렸다. 1929년에 영국 실업율은 이미 7.3%에 달하고 있었으며 1921~1929년의 평균 실업율은 8.3%였다. 1930년대에 상황은 악화되었다. 1929년 이후 실업율이 증가해서 1932년에는 15.6%에 달했고, 이후 실업율이 감소했지만 1938년에도 아직 전체 노동력의 9.3%가 실업상태였다(Feinstein(1972, T57)). 전간기 내내 영국 실업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렀던 원인으로는 일차대전 이전의 환율을 고수하면서 금본위제로 복귀하기 위해서,

---

27) 이상의 통계는 西川(1985, p.222, 266)를 따랐다. 특히 1930년 실업률 추계는 尾高煌之助의 남자실업률 추계를 재인용했다.

28) 佐藤(1981, pp.8-9)에 따르면 일본의 물가신축성을 설명하는 한 중요한 원인은 농업 및 전통적 비농업부문의 광범위한 존재다. 이같은 주장은 出稼 노동 및 이중구조적 노동시장이 일본 임금의 신축적 변동에 기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Gordon(1982, p.25, Table 5)의 미국, 영국, 일본에 관한 비교연구 결과는 佐藤(1981)의 주장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나 De Long & Summers(1986)는 신축적인 임금과 물가 변동이 거시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9) Yasuba(1988), Nakamura(1983, chapter chapter 9), Nanto & Takagi(1985). 금본위제 이탈, 확장적 재정정책으로의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일본의 케인즈'로 불렸던 다까하시의 수상 취임이었다.

금본위제로 되돌아 간 후에는 대외균형 유지를 위해서 실시된 1920년대의 긴축정책과 세계대공황에 따른 수출수요 위축과 같은 부정적 수요충격들이 흔히 지적된다.[30] 그러나 Benjamin & Kochin(1979)은 전간기 영국 실업의 상당 부분이 임금에 비해 실업수당이 지나치게 후했기 때문에 발생한 자발적 실업이었다고 주장했다.[31] 또 Crafts(1987 & 1989)는 1929년 이후 영국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1930년대 중엽까지 계속 상승하는 현상에서 잘 나타나듯이 전간기 영국에서 실업률 변동이 임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1930년대에 크게 증가한 장기실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우선 1929년 이후 총수요 감퇴로 실업이 크게 증가했는데 실업자들이 상당 기간을 실직 상태로 지내는 가운데 이들이 지닌 기술이 부식되고 또 使用者들은 이들의 실업경력 자체를 어떤 결함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실업자(unemployed)들은 점점 직업을 구하기 어렵게(unemployable)되어 가고 장기실업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생성된 장기실업자들은 사실상 노동력으로 부터 배제된 존재이므로 장기실업 증가는 임금에 거의 하락 압력을 가하지 못했다. 또 수요 위축에 의한 실업증가는 바꾸어 표현하면 직업을 가진 내부자들(insiders)의 감소와 그렇지 못한 외부자들(outsiders)의 증가 인데 내부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또는 비공식적 담합을 통해 기업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도 노동할 의사를 가진 외부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실업이 증가해도 임금은 잘 떨어지지 않고 실업은 장기화된다.[32] 전간기 영국의 조합화율은 평균 30% 정도에 달했고(Broadberry (1986, p. 87, Figure 9. 1)), 이와 아울러 노사협의회(trade board)를 통한 단체교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부자들의 담합은 전체 노동력의 3/4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rafts (1989, p. 248)).

V. 결 론

독일이나 일본에서 처럼 파시즘이 등장하면서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간 나라들에서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크게 약화됐고 이것이 고용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조적으로 산업부흥법과 노동관계법이 노동조합, 최저임금제 등의 도입, 확산을 고무했다. 이같은 정책변화가 효율임금, 내부노동시장

30) 1920년대 영국의 디플레 정책에 관해서는 Broadberry(1986, chapters 14 & 15)와 Temin(1989, Lecture 1)을 참조. 전간기 영국 실업률에 미친 수요충격의 영향에 관한 분석은 Dimsdale, Nickell & Horsewood(1989) 참조.

31) 그러나 Benjamin & Kochin(1979)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Hatton(1986)이나 Broadberry(1986) 참조.

32) 실업에 관한 내부자-외부자 모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Lindbeck & Snower(1985 & 1987), Blanchard & Summers(1986), Solow(1990)를 참조. 일시적 충격으로 증가한 실업이 고용가능성 감소나 내부자들의 담합으로 장기화되는 현상은 '磁氣履歷(hysteresis)' 효과로 불린다.

발전과 같은 노사관계의 장기적 진화와 맞물린 결과, 1930년대의 대량 실업 속에서도 미국 실질임금은 상승할 수 있었다. 임금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따라서 실질 부와 실질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했는데, 이는 소비와 투자수요를 위축시켰다. 그 결과 금본위제 이탈과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상쇄되어 버렸고, 고용확대효과도 대단한 것이 될 수 없었다. 다른 한편 실질 임금 상승은 기업들의 노동력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1930년대 내내 미국은 대량실업으로 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다. 1930년대 영국에서는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크게 강화되지도 약화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수당과 이미 일반화되어 있던 단체 교섭 제도 아래서의 내부자들의 담합이 1930년대 영국 고용 확대를 제약했다.

노동은 하나의 상품이지만 다른 상품들과는 뚜렷이 구별된다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이제 까지의 논의는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다른 상품과는 달리 노동의 가격에는 수요와 공급 이외에도 많은 '비경제적'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임금은 한 경제의 巨視的 상황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다. 그런데 임금 결정에 단순히 수요와 공급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요인들이 참가한다면, 이는 곧 경제이론만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변동의 이해는 學際的(interdisciplinary) 接近을 요구한다.

참 고 문 헌

Allen, S.G.(1992) Changes in the Cyclical Sensitivity of Wages in the United States, 1891~1987, *American Economic Review* 82, 122-140.

Akerlof, G.A.(1980) A Theory of Social Custom, of Which Unemployment May Be One Consequ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4, 749-775.

Akerlof, G.A.(1982) Labor Contracts as Partial Gift Exchang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7, 543-569.

Akerlof, G.A.(1984) Gift Exchange and Efficiency Wages: Four Views, *American Economic Review* 74, 79-83.

Azariadis, C.(1975) Implicit Contract and Underemployment Equilibri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1183-1202.

Baily, M.(1974) Wages and Employment under Uncertain Demand, *Review of Economic Studies* 41, 37-50.

Baily, M.(1983) The Labor Market in the 1930s, in Tobin, J., ed., *Macroeconomics, Prices and Quantities*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Benjamin, D.K. & Kochin, L.A.(1979) Searching for an Explanation of Unemployment in Interwar Britai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441-478.

Bernanke, B.(1986) Employment, Hours, and Earnings in the Depression: An Analysis of eight Manufacturing Indus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76, 82-109.

Bernanke, B. & Parkinson, M.(1989) Unemployment, Inflation and Wages in the American

Depression: Are There Lessons for Europe?, *American Economic Review* 79, Papers and Proceedings, 211-214.

Bernanke, B. & Parkinson, M.(1991) Procyclical Labor Productivity and Competing Theories of the Business Cycle: Some Evidence from Interwar U.S. Manufacturing Indus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 439-459.

Bernstein, M.(1987) *The Great Depr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lanchard, O.J. & Summers, L.H.(1986)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in Fischer, S., ed., *NBER Macroeconomics Annual 1986* (Cambridge, MA: MIT Press)

Broadberry, S.N.(1983) Unemployment in Interwar Britain: A Disequilibrium Approach, *Oxford Economic Papers* 35, 463-485.

Broadberry, S.N.(1986) *The British Economy between the Wars* (Basil Blackwell: Oxford)

Cagan, P.(1975) Changes in the Recession Behavior of Wholesale Prices in the 1920s and post-World War II, *Explorations in Economic Research* 2, 54-104.

Cagan, P.(1981) Comments on "Some Macroeconomic Impacts of 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1933~1935", in Brunner, K., ed, *The Great Depression Revisited* (Hague: Kluwer-Nijhoff)

Cecchetti, S.G.(1992) Price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Was the Deflation of 1930~1932 Really Unanticipated?, *American Economic Review* 82, 141-156.

Coen, R.M.(1973) Labor Force and Unemployment in the 1920s and 1930s: A Re-examination Based on Postwar Experie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5, 46-55.

Cohn, R.L.(1992) Fiscal Policy in Germany during the Great Depress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9, 318-342.

Cooper, R. & John, A.(1988) Coordinating Failures in Keynesian Model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 441-463.

Crafts, N.F.R.(1987) Long Term Unemployment in Britain in the 1930s, *Economic History Review* 40, 418-432.

Crafts, N.F.R.(1989) Long-term Unemployment and the Wage Equation in Britain, 1925~1939, *Economica* 56, 247-254.

Darby, M.(1976) Three-and-a-Half Million US Employees Have Been Mislaid: Or, an Explanation of Unemployment, 1934-41,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1-16.

De Long, J.B. & Summers, L.H.(1986) Is Increased Price Flexibility Stabilizing?, *American Economic Review* 76, 1031-1044.

Dimsdale, N.H., Nickell, S.J. & Horsewood, N.(1989) Real Wages and Unemployment in Britain during the 1930s, *Economic Journal* 99, 271-293.

Eichengreen, B. (1992a)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Great Slump Revisited, *Economic History Review* 45, 213-239.

Eichengreen, B.(1992b) *Golden Fett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ichengreen, B. & Hatton, T.J. (1988) Interwar Unemployment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An Overview, in Eichengreen, B. & Hatton, T.J., eds, *Interwar Unemployment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Dordrecht: Kuwer Academic Publishers)

Feinstein, C.H.(1972) *Statistical Tables of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Output of the United Kingdom, 1855~196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iedman, M. & Schwartz, A.J.(1963)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rdon, R.A.(1975) Wages, Prices and Unemployment, 1900～1970, *Industrial Relations* 14, 273-301.

Gordon, R.J.(1982) Why U.S. Wage and Employment Behaviour Differs from That in Britain and Japan, *Economic Journal* 92, 13-44.

Gordon, R.J. (1983) A Century of Evidence on Wage and Price Stickines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in Tobin, J., ed., *Macroeconomics, Prices and Quantities* (Washington DC: Bookings Institution)

Gordon, R.J.(1988) Back to the Future: European Unemployment Today Viewed from America in 1939,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8, 271-312.

Gordon, R.J.(1990) *Macroeconomics* (Glenview: Scott, Foresman)

Hamilton, J.D.(1992) Was the Deflation during the Great Depression Anticipated? Evidence from the Commodity Futures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82, 157-178.

Hardach, K.(1980) *The Political Economy of Germany in the Twentie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atton, T.J. (1983) Unemployment Benefits and the Macroeconomics of the Interwar Labour Market, *Oxford Economic Papers* 35, 486-505

Hatton, T.J.(1986) The Analysis of Unemployment in Interwar Britain: A Survey of Reseach, in Pearce, D.E. & Rau, N, eds., *Economic Perspectives* (London: Harwood)

Hatton, T.J.(1988) A Quarterly Model of the Labour Market in Interwar Britain,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0, 1-25.

Jacoby, S.M.(1985) *Employing Bureaucracy: Manages, Unions and the Transformation of Work in American Industry, 1900～1945*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Jensen, R.D.(1989) The Causes and Cures of Unemployment in the Great Depressio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9, 553-584.

Kesselman, J.R. & Savin, N.E. (1978) Three-and-a-half Million Workers Never Were Lost, *Economic Inquiry* 16, 205-225.

Keynes, J.M.(1963)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Macmillan)

Kuznets, S.(1940) Schumpeter's Business Cycle, *American Economic Review* 30, 257-271.

Lebergott, S.(1964) *Manpower in Economic Growth: The American Record since 1800* (New York: McGraw-Hill)

Lindbeck, A. & Snower, D.J.(1985) Explanations of Unemployment,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 34-59.

Lindbeck, A. & Snower, D.J. (1987) Efficiency Wages versus Insiders and Outsiders, *European Economic Review* 31, 407-416.

Lucas, R.E. & Rapping, L.A.(1969) Real Wages, Employment, and Inf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7, 721-54.

Lucas, R.E. & Rapping, L.A.(1972) Unemployment in the Great Depression: Is There a Full Explan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0, 186-91.

Macpherson, W.J.(1987)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c. 1868～1941*(Macmillan: London)

Margo, R.A.(1991) The Microeconomics of Depression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1, 333-341.

Mitchell, B.R.(1977) Statistical Appendix, in Cipolla, C.M., ed, *Fontana Economic History of*

Europe (Harvester Press: New York)

Mitchell, D.J.B.(1985a) Wage Flexibility in the United States: Lessons from the Past, *American Economic Review* 75, 36-40.

Mitchell, D.J.B. (1985b) Wage Flexibility: Then and Now, *Industrial Relations* 24, 266-79.

Nakamura, T.(1983) *Economic Growth in Prewar Jap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Nanto, D.K. & Takagi, S.(1985) Korekiyo Takahashi and Japanese Recovery from the Great Depre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369-374.

Nickell, S.J.(1990) Unemployment: A Survey, *Economic Journal* 100, 391-439.

Olson, M.(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Osterman, P.(1984) Introduction, in Osterman, P., ed., *Internal Labor Markets* (Cambridge, Mass: Press)

Poulson, B.W.(1981) *Econom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Macmillan)

Raff, D.M.G. & Summers, L.H.(1987) Did Henry Ford Pay Efficiency Wag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87, S57-S86.

Rees, A.(1959) Pattern of Wages, Prices and Productivity, in American Assembly, *Wages, Prices, Profits and Productivity* (New York: American Assembly)

Rees, A.(1970) On Equilibrium in Labour Marke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8, 306-10.

Rees, A.(1972) Real Wages and Inflation: Rejoind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0, 192.

Reynolds, L.G., Masters, S.H. & Moser, C.H.(1991)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10th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Romer, C. (1986) Spurious Volatility in Historical Unemployment Dat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1-37.

Rosen, H.S. & Quandt, R.E.(1978) Estimation of a Disequilibrium Aggregate Labor Marke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0, 371-79.

Sachs, J.(1980) The Changing Cyclical Behaviour of Wages and Prices: 1890~1976, *American Economic Review* 70, 78-90.

Schumpeter, J.A.(1939) *Business Cycles* (New York: McGraw Hill)

Shapiro, C. & Stiglitz, J.E.(1984) Equilibrium Unemployment as a Worker-Discipline Device, *American Economic Review* 74, 433-444.

Silverman, D.P. (1988) National Socialist Economics: The Wirtschaftswunder Reconsidered, in Eichengreen, B. & Hatton, T.J., eds., *Interwar Unemployment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Dordrecht: Kuwer Academic Publishers)

Solow(1990) *The Labor Market as a Social Institution* (Oxford: Basil Blackwell)

Sundstrom, W.A.(1990) Was There A Golden Age of Flexible Wages? Evidence from Ohio Manufacturing, 1892~191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0, 309-20.

Temin, P.(1976) *Did Monetary Forces Cause the Great Depression?* (New York: Norton)

Temin, P. (1989) *Lessons from the Great Depression* (Cambridge, Mass: MIT Press)

Temin, P.(1990) Socialism and Wages in the Recovery from the Great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0, 297-307.

Temin, P. & Wigmore, B.A.(1990) The End of One Big Defla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7, 483-502.

US Department of Commerce(1975)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llis, J.J.(1989) Employment in the Great Depression: New Data and Hypotheses,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6, 45-72.

Weinstein, M.M.(1980a) Recovery and Redistibution under the NIRA, in *Studies in Monetary Economics*, Vol. 6 (Amsterdam: North Holland)

Weinstein, M.M.(1980b) Some Macroeconomic Impacts of 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1933～1935, in Brunner, K., ed, *The Great Depression Revisited* (Hague: Kluwer-Nijhoff)

Weiss, A.(1991) *Efficiency Wages* (Clarendon Press: Oxford)

Yasuba, Y.(1988) The Japanese Economy and Economic Policy in the 1930s, in Gregory, R.G. & Butlin, N.G., eds, *Recovery from the Depr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佐藤和夫(1981) 戦間期日本のマクロ經濟とミクロ經濟，中村隆英(編)，戦間期日本經濟分析(山川出版社：東京)

西川俊作(1985) 日本經濟の成長史(東洋經濟新報社：東京)